

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중국의 新성장 동력, 도시화

삼성경제연구원 | SERI 경제포커스 제 409 호 | 2013.2.5

<http://www.seri.org/db/dbReptV.html?menu=db03&submenu=&nPage=2&pubkey=db20130205001>

향후 중국의 도시화로 투자와 소비수요의 대폭 증가, 중산층 확대와 산업구조 변화 등이 예상됨으로, 중국에서 다양한 사업기회의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-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

- 중국 도시화의 경제·사회적 의미
 - 2013 년 중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‘도시화’
 - 중국경제는 수출의존형 성장전략에서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방식 전환
- 시사점
 1. 중국의 도시화로 투자와 소비 수요의 대폭 증가
 - 2020 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투자유발 예상효과는 40 조 위안(2011 년 GDP 의 85%)
 - 도시화율 1% 상승은 소비증가율을 1.6% 제고
 2. 도시화로 중산층 확대 및 산업구조 변화
 - 도시발전은 중산층의 성장 및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
 - 도시발전은 서비스업의 비중과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
 3. 다양한 사업기회 발굴 및 정부-기업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
 - 향후 중국의 ‘시티노믹스(Citinomics)’로 인해 생성되는 방대한 사업기회에 주목
 - 중국 도시건설이 제공하는 기회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단일기업의 개별적 접근보다는 정부-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
 - 다만, 중국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환경 악화 가능성에 주의

도시화, 향후 10년 중국 경제 좌우할 동력

LG 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 | 2012.2.6 (1235.36 호)
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overseas/article.asp?grouping=01010200&seq=625>

중국의 신형 도시화는 도시인구 증가, 농민공의 시민화, 도시 정주인구의 보다 질 높은 생활 추구 등으로 도시수요의 확대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다양한 산업의 성장 촉진

- 중국 도시화의 의의 및 전개 방향
 - 중국의 성장속도 측면(경제성장률의 연착륙)이나 경제구조 전환 측면(소비비중 및 3차산업 비중 제고)에서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
 - 기존 도시거주 농민공 및 신규 유입자에게도 도시 호적인구와 동등한 공공서비스 제공
 - 지역 간 산업 재배치와 결합을 통한 도시화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
 - 소비주도의 성장모델로 전환, 서비스업 비중 확대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
- 신형 도시화의 경제적 영향
 1.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
 - 도시화의 효과 : 각종 인프라 증설과 공공서비스 확대, 도시 유입 인구의 구매력 상승에 따른 제반 산업 성장
 -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: 투자유발 이외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지출과 농촌 인구의 도시민화에 따른 소득 및 소비 증가
 2. 산업별 영향
 - 산업에 미치는 영향: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시장에서의 수요확대, 농민공의 시민화에 따른 도시시장 수요 업그레이드 및 도시투자 구조 변화
 - 도시수요 확대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다양한 산업의 성장 촉진
 - 교통 인프라, 건축,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, 스마트 시티, 지능형 교통, 의료보건, 부동산, 소매유통 등의 급속한 확대 예상
 3. 도시 규모별 및 지역별 영향
 - 신형 도시화는 중간규모의 성시(인구 50만~1,000만 명)에서 성공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음
 - 도시군 내 규모가 다른 도시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산업 및 시장의 발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 추정됨

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: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

현대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 | 2013.1.24

http://hri.co.kr/download.asp?file_path=%2Fpublication%2F&file_name=2013124112656%5B1%5D.pdf

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은 관련 제도정비, 세제혜택, 금융지원 확대 및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리스크 분담 등

- 배경
 -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, 정부재원의 한계에 따른 공급물량 제약, 임대주택의 품질개선 미흡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
 - 1-2인 가구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월세 중심의 임대주택 수요는 빠르게 증가
 -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하나 여전히 부족하며,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
- 정책적 시사점
 - 민간 임대주택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비, 세제혜택, 금융지원 확대
 -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택지구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, 준(準)공공임대주택 등의 도입 추진
 - 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부동산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리스크 분담 방안 마련
 -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보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향상
 - 대형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비하여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

상반기 전세 가격 상승세 지속된다 : 올해도 연초 전세대란 반복된다

현대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 | 2013.2.15

http://hri.co.kr/download.asp?file_path=%2Fpublication%2F&file_name=201321583054%5B1%5D.pdf

전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매거래 확대유도, 전세 공급량 증대, 재개발·재건축 사업시기 조정 및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확대

- 전세가격 전망
 - 2012년 12월부터 전세가격 상승률은 예년평균을 상회하며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빠른 상승세
 - 수요측면: 전세이주 수요증가, 전세선호 현상심화, 전세 재계약 수요증가
 - 공급측면: 소규모 전세 공급물량 감소, 주택자산관리 패러다임 변화
- 대응과제
 - 현재 주택시장에서 전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매거래 확대유도, 전세 공급량 증대, 재개발·재건축 사업시기 조정 등의 대책 필요
 -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세 재계약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
 -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완화 기간연장 등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 감소 유도 및 고령자 가구 등을 고려한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필요
 - 재개발·재건축 사업 추진시 이주민들의 전세수요를 고려한 사업시기 조정 등의 대책 필요
 - 전세 공급량 증대를 위해 미분양아파트 활용
 - 소형 및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

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: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분석

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| 2013.2.27

http://hri.co.kr/download.asp?file_path=%2Fpublication%2F&file_name=2013228112428%5B1%5D.pdf

지방공기업 부실화 방지대책은 부채에 대한 측정·관리·감독 강화,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 실시, 자발적인 재무구조 개선 유도

- 공기업 부채 현황 및 특징
 -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화(2003년 56.3% → 2011년 51.9%)되는 중에도 자체수입 대비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중은 43%에서 86%로 급증
 -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특히 취약하며, 부실화 가능성이 많은 부문은 지역개발기금(100%, 16개), 도시개발공사(32%, 5개), 지하철공사(57%, 4개) 등임
 - 자체수입 대비 공기업의 부채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인천(193%)과 강원(118%)이며, 서울(32%, 10개), 경기(14%, 14개), 강원(32%, 10개) 지역에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지방공기업의 42%가 분포
- 시사점
 -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측정·관리·감독을 강화하여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
 - 정확한 부실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 실시가 필요
 - 정부와 시민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, 지방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

지하경제 해소 방안 : 투명 거래와 성실 납세 유인책 강화 필요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3.3.4

http://hri.co.kr/download.asp?file_path=%2Fpublication%2F&file_name=20133474835%5B1%5D.pdf

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제공, 현금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, 교육을 통한 납세의무 의식제고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강화

- 지하경제의 규모 및 배경
 -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 조원(2012년 기준)으로 명목 GDP 대비 약 23%로 추정
 - 자영업자는 실질소득 파악이 힘들어 소득탈루율이 높으며, 국민부담률 증가율의 빠른 증가세로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회피 유혹도 증가
 - 부정부패와 노동시장의 규제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
- 정책적 시사점
 -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 강화
 - 현금거래가 빈번한 대형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
 -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여 탈세예방
 - 유사상품 유통, 자금세탁 등 불·탈법 거래 차단 및 부정부패 방지책 마련
 -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 축소
 - 교육을 통한 납세의무 의식 제고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강화

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모색

현대경제연구원 | VIP Report | 2013.2.22

http://hri.co.kr/download.asp?file_path=%2Fpublication%2F&file_name=201322293248%5B1%5D.pdf

중소기업 지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, 공정거래 실천여부 감독 및 처벌기준 강화, 금융·세제 상의 지원 확대, R&D 및 설비투자 확대

- 중소기업 현황
 - 전체 산업의 99.9%, 제조업의 99.5%(2010년 사업체수 기준)
 - 고용인원은 1,22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수 1,414만 명의 86.7%
-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 전략
 -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으로 외연 확대
 - 저부가 업종이나 제품은 고부가 업종으로 사업전환이나 고기술 제품 개발
 - 내수 저부가 업종은 내수시장에서 고부가화가 시급하며, 향후 수출 고부가형으로 고도화
 - ‘대기업의존형’은 품질 및 기술경쟁력 제고, 브랜드화 등을 통한 ‘대기업협력형’으로 전환
-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
 - 일률적인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전환
 -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 실천여부 감독, 자율적 법 준수 유도 및 위법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
 - 중소기업의 R&D 능력배양과 이에 대한 다양한 금융·세제 상의 지원 확대
 - 고부가 시장으로의 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기업과의 수출 공조시스템 구축 장려
 - 품질과 브랜드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R&D 및 설비투자 확대 지원
 -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한계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간 M&A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과 사업전환 유도

청년 취업, 빈익빈 부익부 가능성 높다 : 20-30년대 청년들의 취업 관련 인식 분석

현대경제연구원 | VIP Report | 2013.2.15

http://hri.co.kr/download.asp?file_path=%2Fpublication%2F&file_name=201321585215%5B1%5D.pdf

청년 실업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청년층의 세분화를 통한 고용유도 정책, 중소기업의 복지 평균화,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의 이직사다리 활성화 및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

- 청년들의 취업 관련 인식 및 준비
 - 20-30대 취업준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, 취업준비자가 원하는 직장은 공무원(27.9%), 유명벤처 및 중견기업(26.4%), 중소기업(23.6%), 대기업(22.1%)순서
 -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(24.1%), 낮은 임금(24.1%), 고용불안(22.4%), 불안한 비전(22.4%)이며, 중소기업 취직에 대해 부모의 반대가 심하다는 응답도 26.3%
 - 취업을 할 수 있는 한계 나이는 평균 30세, 대출초입 희망연봉은 약 2790만원
 - 취업준비자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영어공부(33.5%), 취업정보 탐색(30.4%), 전공분야 공부(16.3%), 자격증 취득(13.5%), 인턴 등 대외활동(6.3%) 순서
- 시사점
 - 취업에 대한 인식이 상이한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현미경 고용유도 정책 마련
 -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의 복지 평균화 모색
 - 정부는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직사다리 활성화
 - 취업에 대한 도전적 마인드 강화를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 촉구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
email: urbandata@si.re.kr
phone: 02-2149-1022